

안녕하세요. 월비스 LUKAS 팀입니다.

저는 사회문화와 법과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장진민 강사구요^^

카톡으로 수험생분에게 받은 사진 파일 보고 바로 해설 올려드리겠습니다당.

경제 담당 교수 서호성 교수도 현재 실시간으로 해설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당^^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작하겠습니다.

=====

문 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자기가 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우와 차별을 받는다.
- ②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자원 동원 능력이 뒤처진다.
- ③ 사회적 지위에 기초하여 결정되기 보다는 사회에서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 ④ 자신이 차별을 받는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가진다.

정답 3번

아무리 수적 규모가 크다고 해도 지배집단으로부터 차별을 당한다면 그 집단이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즉,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문 2. 다음은 A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A국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다. A국의 당면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부의 국채 매입 확대
  - 기준 금리 인하
  -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 지출의 조기 집행
- ① 경기 활성화
  - ② 인플레이션 억제
  - ③ 기술 개발 여건 조성
  - ④ 국제 수지의 단기적 개선

정답 ①

A국의 당면과제

국채매입확대, 기준금리인하,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정부지출의 조기집행

은 모두 불경기의 대책이다. 따라서 이것은 경기활성화를 하기 위한 전략이다.

문3. ....아흑 TT 문제까지 다 칠러니까 좀 힘드네요. 문제와 아주 자세한 해설 자료집은 추후에 따로 완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3번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문제이군요.

정답 4번

성남시 분당구 주민은 광역지자체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성남시"를 자치단체로 인정받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성남시 분당구는 같은 구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 볼 때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또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4. 민법상 법률행위 효력 문제군요.

정답 4번

미성년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중.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유아, 만취자는 의사무능력자이구요 법률효과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보기4번에서는 취소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장래를 향하는 것이 아니구요.

문5.

정답 1번

(가)는 양적 연구, 즉 실증적 연역적 연구 절차를 보여주네요. (나)는 이에 상대적인 질적, 해석적 연구 절차군요.

(나)의 주장 논거이니까 가. 인간은 다르게 반응한다... 즉 능동적 인간들의 다양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적 연구는 인간 행위의 정형화, 그리고 그 행위속의 법칙성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 은 질적 연구의 주장 논거가 맞습니다.

나. 역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능동적 인간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 나입니다.

다,르 은 양적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이네요.

문6.

정답 3번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문제이군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참정권과 관련해서는 우선 당적을 가질 수 없구요. 지방선거에 한해서 주민투표권과 참정권은 인정됩니다.

외국인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되구요. 또한 외국인 참정권 중 피선거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7.

정답 2번

국민 참여 재판제도에 관한 문제이군요.

가. 9명 맞습니다.

나.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권고적 효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 민사사건은 참여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르. 경찰관 변호사는 제외사유입니당.

코.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구요

버. 맞습니다.

문8.

정답 ④

높은 수익률은 높은 위험을 야기한다. 또한 원금의 안정성은 예금, 채권, 주식순이므로 A는 주식, B는 채권, C는 예금이다.

- ①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채권, 주식은 상환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②기대수익률이 높은 것은 주식
- ③정부, 특수법인이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채권
- ④채권은 만기, 이자율, 액면가가 정해져 있다.

문9.

정답

문제오류인듯함 - 노령화지수라면 3번

- ①노년부양비=65세 이상/생산가능인구 \* 100
- ②고령화지수= 65세 이상/전체인구 \* 100

고령화지수(index of aging) : 전체 인구에 대한 노년층인구(65세이상)의 비율로서 인구의 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고령화 지수 = (65세이상인구/전체인구)\*100

○ 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일 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일 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일 때를 초고령화사회(super aged society)라고 규정

○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돌입하였고, 2018년 이후에는 총인구의 15%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전망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연도	노년부양비	고령화지수
2000	10.1	33.0
2010	15.0	66.3

노령화지수= 65세 이상 / 0~14세 \* 100

위를 고령화지수로 풀면 나오지 않는다. 노령화지수로 풀면

- ③ 2000년의 노인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2/3이하이다. 노령화지수가 33%라면 단순히 노인이 33명일 때 아이들이 100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옳다.
- ④ 2010년의 유소년인구는 생산가능인구의 2/3이상이다. 노년부양비/노령화지수를 하면 유소년인구/생산가능인구가 된다. 이수치가 15/66.3이므로 약 1/4이 된다.

문10.

정답 4번

이 문제는 거의 수능급이네요;;; 많이 당황하셨을듯 T\_T

이 도표 계산 문제는 말로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설명드리자면.....

보기1. 계층 세습 정도를 묻는 것입니다. 즉, 상층은 80/100 중층은 160/200(80/100)  
하층은 85/100.

따라서 세습 정도는 하층이 쥔 높습니다.

보기2. 세대간 상승은 부모 하 -> 자녀 중 + 자녀 하... 따라서 5+5

부모 중 -> 자녀 상... 따라서 30. 합계 40

세대간 하강은 부모 상 -> 자녀 중 + 자녀 하... 따라서 7+3

부모 중 -> 자녀 하... 따라서 10. 합계 20

보기3. 문제에서 자녀세대의 전체 상, 중, 하 층의 인구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사회계층 구조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중층이 제일 많이 보인다고 해서 이 수치가 자녀세대의 전체 규모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보기4. T+ 10년에서 중층 부모의 자녀 중 현재 상층이 30이므로 어찌되었든 간에 상층으로 이동한 최대수치는 30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문11.

정답 1번

사회보장제도 문제네요. 매년 나오는 거죠. 보험료 징수 방법이라는 부분에서 사회보험이라는 것을 간파하셔야함!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인거죠. 의료급여제도는 사회보험이 아닌 공공부조에 해당됩니다. 수능에서도 매년 나오는 전형적인 낚시 문제 되겠습니다.

문12.

정답 4번

내각의 임기는 법에 보장됩니다. 단 내각불신임 또는 의회 해산권 발동시 총사퇴 또는 다시 선거가 이뤄진다는 측면이 있는거죠.

문13.

정답 3번

보기3은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네요. 이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원칙은 아녜요^^

진술거부권, 체포 구속 적부심, 그리고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은 다 맞는 설명들이네요.

문14.

정답 1번

시간의 변동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보다 원유로 환율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미국보다 유럽에서 원화 가치가 더 높게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거구요. 또한 유로 대비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15.

정답 3번

제시문은 증속이론에 대한 설명이네요. 미발전이 아닌 저발전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구용. 즉 이것이 남반구와 북반구의 경제적 격차를 의미하는 남북문제의 심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16.

정답 2번

정말 지엽적인 별의 별 문제가 다 나오네요 TT  
대통령 선거는 기탁금이 3억원입니다.

문17.

정답 ③

A로의 변화 수요증가

B로의 변화 수요증가 공급증가(동일하게)

C로의 변화 공급증가

- ①원자재의 가격상승은 공급감소
- ②소득수준감소는 수요감소
- ③생산기술향상은 공급증가
- ④A와 B모두 수요증가를 수반해야 함

문18.

정답 ②

A: 완전경쟁시장, B: 독점적경쟁시장 C: 과점시장 D: 독점시장

- ①기업이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격결정자인 독점시장
- ②독점적 경쟁시장은 단골을 만들기 위한 상품차별화가 이루어짐
- ③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시장은 완전경쟁시장
- ④독점시장은 생산자 잉여가 큰 시장임

문19.

정답 4번

행정부의 대통령령 제정의 미비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례의 문제네요. 그리고 이 문제는 입법부작위와 행정부작위의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요 좀 어려웠을 겁니다.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생긴 것으로 이는 행정부작위입니다. 입법부작위란 말 그대로 국회의 법률 제정 미비 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보기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평이하구요.

문20.

정답 1번

ㄱ. 신민형    ㄴ. 향리형    ㄷ. 참여형 정치문화군요.

신민형은 input 단계에서는 (-), 즉 정책 형성 과정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output 단계에서는 (+).. 즉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정치 문화를 의미합니다. 알몬드의 정치문화론까지 나오다니.... 솔직히 좀 오버스럽네요 ㅜㅜ

=====

이상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구요 다시한번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

LUKAS Team 올림.